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99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8  |
| 1. 제명의 변경, 목적 .....                 | 8  |
| 2. 공공기관·기록물 등의 정의 세분화·명확화 .....     | 9  |
| 3.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지원 .....             | 17 |
| 4. 기록물관리기관 용어 정비 등 .....            | 25 |
| 5. 기록관 설치·운영의 특례 등 .....            | 32 |
| 6.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         | 36 |
| 7.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등 .....                | 39 |
| 8. 기록물의 관리 .....                    | 43 |
| 9. 전자·비전자기록물 관리 .....               | 52 |
| 10. 간행물의 관리 및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의 관리 ..... | 59 |
| 11. 기록물 폐기 제도 개선 .....              | 61 |
| 12. 국가기관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보관 특례 .....     | 64 |
| 13. 기록물관리 교육 훈련 .....               | 67 |
| 14.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제도 개선 .....        | 70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수집·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명의 변경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명 및 제3조)

이 법은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취득하는 기록물 및 국외에 소재하는 기록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도 적용되므로 법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나. 기록물의 정의 명확화 및 세분화(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제2호의2 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1)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류(博物類)로서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形)의 물건을 ‘기록물’로 정의하고,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로 구분함.

2)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민간기록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외기록물’로 각각 정의함.

### 다. 기록관 설치·운영의 특례(안 제13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각급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설치

·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및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데이터형기록물 관리의 특례(안 제19조제4항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데이터형기록물의 경우에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

도록 함.

바.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평가 개선(안 제19조제9항)

공공기관이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국가기록원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안 제20조의3 신설)

공공기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전자화하기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행물의 관리 개선(안 제22조)

1) 간행물 발간 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주체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제외함.

2)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국가기록원에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 시청각 공공기록물 관리의 특례(안 제23조)

공공기관은 시청각 공공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청각 공공기록물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차. 박물관 관리의 특례(안 제24조)

공공기관은 박물관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박물관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카. 기록물의 보존가치 재분류에 따른 폐기 제도 개선(안 제27조제2항)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록물의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안 제42조제3항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도록 함.

파.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관리 제도 개선(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1) 국가지정기록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관리를 국가기록원의 장이 하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함.

2)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가치가 유지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서 및 물품을 교부하도록 함.

하.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및 민간기록물 등의 관리(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

보하도록 함.

- 2)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Ⅲ. 검토의견

#### 1. 제명의 변경, 목적

개정안은 제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행 법이 현재에도 민간·국외기록물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임<sup>1)</sup>.

개정안은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서 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                                                                                                                                   | 개정안                                                                                                                                                         |
|--------------------------------------------------------------------------------------------------------------------------------------|-------------------------------------------------------------------------------------------------------------------------------------------------------------|
| <p><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u></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u>국가기록물법</u></p> <p>제1조(목적) 이 법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공공기관, 기록물 등의 정의 세분화·명확화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나열하고, 기록물의 정의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 등으로 세분화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p><u>제3조(정의)</u>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 <p><u>제2조(정의)</u> -----<br/>-----.</p>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p> <p>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p> <p>다.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p> <p>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p> |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립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기록물”이란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박물류[博物類,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形)의 물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로 구분한다.

2의2.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말한다.

2의3. “민간기록물”이란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의4.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의5. “전자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신 설>

3. 4. (생 략)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신 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생 략)

2의6. “데이터형기록물”이란 전자기록물 중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세트(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형태로 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4. (현행과 같음)

5. -----  
-----  
-----  
----- 국  
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원, 지방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

6.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이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4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                                                                                                                                                                                                                                  |                                                                                                                                                                                                                                                                                             |
|----------------------------------------------------------------------------------------------------------------------------------------------------------------------------------------------------------------------------------|---------------------------------------------------------------------------------------------------------------------------------------------------------------------------------------------------------------------------------------------------------------------------------------------|
| <p>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u>기록물이</u>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u></p> <p><u>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 <p>같음)</p> <p>② -----</p> <p>-- <u>소관 기록물이</u> ----- <u>쉽게 활용되거나 체험될</u> -----</p> <p>-----.</p> <p><u>제6조(공공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u></p> <p><u>공공기관의 장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접수되지 아니한 공공기록물(이하 “비전자기록물”이라 한다)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
|----------------------------------------------------------------------------------------------------------------------------------------------------------------------------------------------------------------------------------|---------------------------------------------------------------------------------------------------------------------------------------------------------------------------------------------------------------------------------------------------------------------------------------------|

먼저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공기업, 지방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sup>2)</sup>,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

## 2)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임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 개정안                     |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 포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률에 규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현행과 같음)                |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조례로 정하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          | -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 (현행과 같음)                |
| -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주요 법률별 ‘공공기관’ 정의 비교>

|            | 「공공기관운영법」 | 「정보공개법」 | 「청탁금지법」 |
|------------|-----------|---------|---------|
| *국가중앙행정기관  |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 *(협의의)공공기관 | ○         | ○       | ○       |
| *지방공기업     |           | ○       | ○       |
| 공직유관단체     |           | △       | ○       |
| *학교        |           | ○       | ○       |
| 학교법인       |           |         | ○       |
| 언론사        |           |         | ○       |

※ \* 「공공기록물법」상 공공기관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다음으로, 기록물의 정의를 세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로 정의하여<sup>3)</sup> 행정적으로 생산·활용되는 물건 중 어디까지가 기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음<sup>4)</sup>.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를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등 고정성을 갖는 물건류로 한정하고 있음.

#### <행정박물 관리 대상(법 제57조제1항 관련)>

| 유 형     | 범 위                                                                |
|---------|--------------------------------------------------------------------|
| 관인(官印)류 | · 국새(國璽) 및 기관장의 직인 등                                               |
| 견본류     | · 화폐, 우표, 훈장·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
| 상징류     | · 공공기관 및 공공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
| 기념류     |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
| 상장·상패류  | · 공공기관이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
| 사무집기류   |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
| 그 밖의 유형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3)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4) 정기애, ‘풍산개는 대통령 기록물인가’, 대한경제, 2022. 11. 24.,

개정안은 기록물의 대상이 되는 박물을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 규정의 ‘장기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등 그 개념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어 어떤 물건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기록물을 생산주체에 따라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국외기록물로 분류하고, 공공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된 기록정보 자료를 전자기록물로 정의하고, 전자기록물 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세트 형태로 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데이터형기록물로 정의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동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기록물과 데이터형기록물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록물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정의 규정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기록물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 기록정보와 박물<br>(박물:장기간 원형 보존 가능한<br>고형 물건 限)           |
| 공공기록물   | <신 설>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br>생산·접수한 기록물                        |
| 전자기록물   |                                                                | 전자적 형태로 생산·접수한<br>기록정보자료                            |
| 데이터형기록물 |                                                                |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해<br>데이터세트 형태로 관리하는<br>기록정보자료         |
| 비전자기록물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br>공공기록물                                       | (현행과 같음)                                            |
| 민간기록물   |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br>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br>인정되는 것<br>(※ 적용범위에서 규정) | 공공기관 외 법인·단체·개인이<br>생산·취득 기록물 중 국가적<br>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 |
| 국외기록물   | <신 설>                                                          | 국외소재 기록물 중 국가적<br>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                      |

### 3.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지원

개정안은 민간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5호·제6호, 제7조 등), 민간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제46조의4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p><u>제3조(정의)</u>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공공기관</u>”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 <p><u>제2조(정의)</u> -----<br/>-----.</p> <p>1. “<u>공공기관</u>”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p>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p> <p>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p> <p>다.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p> <p>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마. 「유아교육법」, 「초·중등</p> |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바. 그 밖에 효율적인 기록물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기록물”이란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및 박물류[博物類, 장기간 원형 보존이 가능한 고형(固形)의 물건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로 구분한다.

2의2.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말한다.

2의3. “민간기록물”이란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의4. “국외기록물”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3. 4. (생 략)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신 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2의5. “전자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2의6. “데이터형기록물”이란 전자기록물 중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세트(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형태로 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3. 4. (현행과 같음)

5. -----  
-----  
-----  
----- 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원, 지방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

6.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이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4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국가기록원-----  
-----  
-----  
-----

야 한다.

<신 설>

-----.

제46조의3(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2. 민간기록물의 수집·복원·보존

3. 민간기록물의 전시 등 활용 증진사업

4. 민간기록물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 사업

5. 그 밖에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사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기록원의 장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신 설>

위한 시설·장비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의 지정, 지원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민간기록물 등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  |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하고, 현행법은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기록물관리기관’이라고 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sup>5)</sup>.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민간기록물 수집의 주체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sup>6)</sup>, 실질적으로는 각급 기록관이나 사업

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6)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부서에 의해 수집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임.

2024년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sup>7)</sup> 등 61개 기관에서 민간기록물을 616,493건 수집·보유하고 있어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민간기록물 254,925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기록물 보유 및 관리 현황>

| 기 관 명   | 수 량<br>(건, 권, 점) | 관 리 현 황              |
|---------|------------------|----------------------|
| 국가유산청   | 12,319           |                      |
| 농촌진흥청   | 1,853            | 간행물, 시청각, 박물류 소장     |
| 제주지방병무청 | 849              | 사진, 도서 소장            |
| 기 타     | 20,882           | 문서, 간행물, 시청각, 박물류 소장 |

\*자료: 국가기록원

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록물 보유 및 관리 현황>

| 기 관 명                 |           | 수 량<br>(건, 권, 점) | 관 리 현 황                                                                                                                                                                                                                     |
|-----------------------|-----------|------------------|-----------------------------------------------------------------------------------------------------------------------------------------------------------------------------------------------------------------------------|
| 광역자치단체                |           | 7,5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비전자기록물시스템에 정보 등록(강원)</li> <li>- 경북기록원 전시컨텐츠로 활용 예정(경북)</li> <li>- 공공기록물과 동일하게 서고에 별도 보존(대구)</li> <li>- 미술관련 작가 및 유족으로부터의 기증 등(대전)</li> <li>- 서고 보존 및 기록관 홈페이지 공개(전북)</li> </ul> |
| 기초자치단체                |           | 464,167          | - 5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중                                                                                                                                                                                                 |
| 지방<br>기록물<br>관리<br>기관 | 서울<br>기록원 | 7,868            | - 디지털 사본 수집 및 실물 위탁 기록                                                                                                                                                                                                      |
|                       | 경남<br>기록원 | 32               | - 마을콘텐츠 기록수집, 서고에 별도 보존                                                                                                                                                                                                     |

\*자료: 국가기록원

개정안은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통해 ① 민간기록물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복원·보존, ③ 민간기록물의 전시 등 활용증진사업, ④ 민간기록물 관련 학술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용이하게 수집하고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4. 기록물관리기관 용어 정비 등

개정안은 기록물관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안 제7조), 국가기록원의 장이 갖는 권한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4. (생략)</p> <p>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u>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u>으로 구분한다.</p> <p>&lt;신설&gt;</p> <p>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 <p>제2조(정의) -----<br/>-----.</p> <p>1.~ 4. (현행과 같음)</p> <p>5. -----<br/>-----<br/>-----<br/>-----<br/>----- <u>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원, 지방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u>(「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을 말한다)---.</p> <p>6. “<u>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u>”이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제4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p> <p>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u>국가기록원</u>-----<br/>-----<br/>-----<br/>-----.</p> |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생략)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기록원) ① -----  
-----  
-----  
----- 국가기록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국가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록원-----  
-----  
-----  
-----.

④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전시물 상호 대여

2. 국민이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열람, 관람 및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운영

3.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 7. (생략)

③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과 기록물

의 협의체 구성·운영

4.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5. 그 밖에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조(헌법기관기록원) ① -----

-----  
-----  
-----  
-----  
-----  
-----  
----- 국가기록원 -----  
-----.

② -----  
-----  
-----  
-----  
“헌법기관기록원”-----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록원-----  
-----  
-----

5. ~ 7. (현행과 같음)

③ 헌법기관기록원의 장은 국가기록원  
-----  
-----

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⑤  
(생략)

⑥ 시·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 8. (생략)

⑦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통

-----  
-----  
-----.

제11조(지방기록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지방기록원” -----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기록원 -----  
-----  
-----

6. ~ 8. (현행과 같음)

⑦ ----- 지방기록원 -----  
-----  
-----.

⑧ 지방기록원의 장은 국가기록원 -----  
-----  
-----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 국가위임사무 -----

|                                                                                                                                                                                              |                                                                                                                                                          |
|----------------------------------------------------------------------------------------------------------------------------------------------------------------------------------------------|----------------------------------------------------------------------------------------------------------------------------------------------------------|
| <p>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 <p>-----</p> <p>-----</p> <p>-----.</p> <p>제14조(특수기록관) ① -----</p> <p>-----</p> <p>-----</p> <p>----- <u>국가기</u></p> <p><u>록원</u>-----</p> <p>-----.</p> |
|----------------------------------------------------------------------------------------------------------------------------------------------------------------------------------------------|----------------------------------------------------------------------------------------------------------------------------------------------------------|

먼저 기록물관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국가기록원’으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헌법기관기록원’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지방기록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기록원의 장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현행법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보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국회의 경우 ‘국회기록보존소’, 법원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보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일반적 명칭으로 ‘기록원’이라는 표현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   | 개정안                    |
|-------------|---|------------------------|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 국가기록원                  |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 헌법기관기록원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 | 지방기록원                  |
| 대통령기록관      |   | (현행과 같음) <sup>8)</sup> |
| <신 설>       |   |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            |

다음으로, 국가기록원의 장이 갖는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국가기록원의 장이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기록물의 국민적 활용·체험 증진’을 이 법의 목적으로 추가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전시물 상호대여, 기록물 열람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구축·운영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8) 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사항 추가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목적       | <신설> |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
| 조치<br>내용 | <신설> | (현행과 같음)                                                                |
|          |      |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전시물 상호 대여                           |
|          |      | 국민이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열람, 관람 및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운영 |
|          |      |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          |      | 그 밖에 기록물의 공유 및 국민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                                         |

## 5. 기록관 설치·운영의 특례 등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지도·감독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업무 중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를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관 내 열람 및 제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4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3조(기록관) ① -----<br>-----<br>-----<br>----- . <단서 삭제>                                                  |
|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br>1. ~ 3. (생략)<br><br>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br><br>5. ~ 8. (생략)                                  | ② -----<br>----- .<br><br>1. ~ 3. (현행과 같음)<br><br>4.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관 내 열람 및 제공<br><br>5. ~ 8.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
| <신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

|                                                                                                                                                                                                                                                                       |                                                                                                                                                                                                                                                                                                                                                                                                                                                       |
|-----------------------------------------------------------------------------------------------------------------------------------------------------------------------------------------------------------------------------------------------------------------------|-------------------------------------------------------------------------------------------------------------------------------------------------------------------------------------------------------------------------------------------------------------------------------------------------------------------------------------------------------------------------------------------------------------------------------------------------------|
| <p>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u>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u></p> <p>5. ~ 8. (생략)</p> | <p><u>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1. <u>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기관</u></p> <p>2. <u>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p> <p>제14조(특수기록관) ① -----<br/>-----<br/>-----<br/>-----<br/>--- <u>국가기록원</u> -----<br/>-----<br/>-----.</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한 기관 내 열람 및 제공</u></p> <p>5. ~ 8. (현행과 같음)</p> |
|-----------------------------------------------------------------------------------------------------------------------------------------------------------------------------------------------------------------------------------------------------------------------|-------------------------------------------------------------------------------------------------------------------------------------------------------------------------------------------------------------------------------------------------------------------------------------------------------------------------------------------------------------------------------------------------------------------------------------------------------|

먼저 기록관 설치의 특례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기록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기록관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나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기록관을 운영할 경우 시설 유지 및 전문 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상급 기관(지방자치단체)이 통합적으로 기록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 및 관리 효율성 증대 효과와 전문적 인력을 활용한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기록관 설치 특례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원칙 |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관 설치      | (현행과 같음)                                    |
| 예외 | 특수기록관 설치 시 기록관 설치 불가 |                                             |
|    | <신 설>                | 다음 공공기관은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상급 기관 등에 기록관 설치·운영 가능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기관                   |

다음으로, 기록관의 정보공개 접수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업무로 ‘소속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sup>9)</sup>.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는 「정보공개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 법에 특별히 「정보공개법」과 다른 사항을 규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오히려 기록관의 업무로서 기록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보다는 ‘기록물의 열람·제공’에 더 부합하고,

이 법에서 위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국민은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기록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사항 구체화

개정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평가’를 추가하는 등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br>-----<br>-----<br>-----.            |
|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br><u>&lt;신 설&gt;</u>                                   | 1. 기록물관리 전반에 관한 국가의 기본정책 수립                                    |
| 2. (생략)                                                                          | 1의2. 제15조의2에 따른 기록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 2. (현행과 같음)                                                    |
|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 3.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 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이하 “대통령기록물”이라 한다)의 관리 |
|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5. 제19조제6항 및 제7항-----<br>-----<br>-----                        |
|                                                                                  | 6. ----- 해제                                                    |

|                                                                                                                                                                                                                                                                                            |                                                                                                                                                                                                                                                                                         |
|--------------------------------------------------------------------------------------------------------------------------------------------------------------------------------------------------------------------------------------------------------------------------------------------|-----------------------------------------------------------------------------------------------------------------------------------------------------------------------------------------------------------------------------------------------------------------------------------------|
| <p>&lt;신 설&gt;</p> <p>7.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p> <p>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p> <p>3. (생 략)</p> <p>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p> <p>5. (생 략)</p> <p>③ ~ ⑨ (생 략)</p> | <p>등 공공기관의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p> <p>6의2. 제19조제9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p> <p>7.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헌법기관기록원의 장</p> <p>2. 국가기록원의 장</p> <p>3. (현행과 같음)</p> <p>4. 지방기록원----- 지방기록원-----</p> <p>5. (현행과 같음)</p> <p>③ ~ ⑨ (현행과 같음)</p> |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점검·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헌법기관이나 각급 학교 등 모든 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관리 업무가 이루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sup>10)</sup>에 근거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에 대한 수용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개정안은 기록물관리와 점검·평가 업무를 공공기관 관할의 기록물관리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기록물 관리의 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7.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등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기록물관리종합계획과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u>제3장의2 기록물관리종합계획 등</u>                                                                                                                                                                                                                                                                                                                                                                    |
| <u>&lt;신설&gt;</u> | <u>제15조의2(기록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록물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br><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u><br><u>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br><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br><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u> |

<신 설>

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기록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제13조제4항 각 호의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sup>11)</sup>. 국가기록원은 기본 정책에 따라 기록물관리 고도화 T/F를 운영하는 등 주기적으로

11)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시책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국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이 기록물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15조의2),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르는 연도별 기록물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5조의 3).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기록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8. 기록물의 관리

개정안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을 기록물 관리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형기록물 관리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기록원의 장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도 관할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0항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5장 <u>기록물의 관리</u>                                                                                                                                                | (현행과 같음)                                                                                                                                           |
| 제19조( <u>기록물의 관리</u>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록물</u> 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u>공공기록물의 관리</u> 등) ① ---<br>-----<br>- <u>공공기록물</u> -----<br>-----<br>-----.                                                                |
|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u>기록물</u> 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u>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u>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 ② -----<br>----- <u>공공기록물</u> -----<br>-----<br>---. 다만, <u>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공공기 |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⑤ 특수기록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이관하거나 기록물 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  
----- 공공기록물을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테이퍼형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기록물의 관리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⑥ -----  
----- 공공기록물의 --

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정보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이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  
-----  
-----  
-----  
----- 국가기록원 -----  
-----  
-----.

⑦ ----- 제6항 -----  
----- 공공기록물의 -----  
-----  
-----  
----- 공공기록물  
의 -----  
----- 국가기록원 -----  
-----.

⑧ ----- 공공기록물의 -----  
-----  
----- 공공기록물  
의 -----  
-----.  
-----  
-----  
----- 국가  
기록원 -----  
-----.

⑨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로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점검 및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기록원의 장: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제외한다)

나. 시·도(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소속기관

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제1호다목에 따른 기관의 장: 해당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음 각

|                                                                                                                                                                  |                                                                                                                                                                                                                                                                                                                                                                                                                                                                                                                                                                   |
|------------------------------------------------------------------------------------------------------------------------------------------------------------------|-------------------------------------------------------------------------------------------------------------------------------------------------------------------------------------------------------------------------------------------------------------------------------------------------------------------------------------------------------------------------------------------------------------------------------------------------------------------------------------------------------------------------------------------------------------------|
| <p><u>&lt;신 설&gt;</u></p> <p>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u>&lt;후단 신설&gt;</u></p> | <p><u>목의 기관</u></p> <p><u>가. 시·군·자치구</u></p> <p><u>나. 그 밖에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p> <p>5. <u>시·도교육감: 다음 각 목의 기관</u></p> <p><u>가. 교육지원청</u></p> <p><u>나. 그 밖에 시·도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p> <p>6. <u>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p> <p>⑩ 제9항 본문에 따라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 및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⑪ 제9항 -----</p> <p>-----</p> <p>----- <u>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관</u>----- . 이 경우 <u>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관(국가기록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시정 조치 요구의 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
|------------------------------------------------------------------------------------------------------------------------------------------------------------------|-------------------------------------------------------------------------------------------------------------------------------------------------------------------------------------------------------------------------------------------------------------------------------------------------------------------------------------------------------------------------------------------------------------------------------------------------------------------------------------------------------------------------------------------------------------------|

먼저 기록물 관리 특례와 관련하여,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공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나,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동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을 기록물 관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데이터형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구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여 데이터형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이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데이터형기록물의 관리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 및 개정안의 공공기록물 관리 비교>

| 구분          |        | 현행                                     | 개정안                                                          |
|-------------|--------|----------------------------------------|--------------------------------------------------------------|
| 공공<br>기록물   | 원<br>칙 |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이관                     | (현행과 같음)                                                     |
|             | 예<br>외 | 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 미설치<br>→ 공공기관의 장 지정부서로 이관 | 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 미설치<br>→ 공공기관의 장 지정부서로 이관<br>or 기록물 관리 부서 자체 관리 |
| 데이터형<br>기록물 | 원<br>칙 | <신 설>                                  | 미이관 & 해당 공공기관 자체 관리                                          |
|             | 예<br>외 |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 인정<br>→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

다만,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부서의 기록물 관리 업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관리기관 확대 및 자료요구권과 관련하여(안 제19조 제9항 및 제10항),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가기록원의 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리 권한을 국가기록원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하고 각 관리 주체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현행 및 개정안의 공공기록물 관리 비교>

| 구분  | 관리 주체           | 관리 대상 공공기관                     |
|-----|-----------------|--------------------------------|
| 현행  | 국가기록원의 장        | 국가기관                           |
|     |                 | 지방자치단체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개정안 | 국가기록원의 장        | 중앙행정기관                         |
|     |                 | 시·도                            |
|     |                 | 육군·해군·공군본부 <sup>12)</sup> 등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속기관                           |
|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     | 육군·해군·공군본부 등의 장 | 육군·해군·공군본부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     | 시·도지사           | 시·군·자치구                        |
|     |                 | 그 밖에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     | 시·도교육감          | 교육지원청                          |
|     |                 | 그 밖에 시·도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

12) 육군·해군·공군본부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임.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

그동안 기록물 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 권한이 국가기록원의 장에게만 있어 2만여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물 관리 실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보존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관리권한을 부여받는 주체들이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 삭제 <2020. 3. 31.>
  3. 삭제 <2020. 3. 31.>
  4. 삭제 <2020. 3. 31.>
  5. 시·도
  6.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해군·공군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가.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나.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 ② ~ ⑦ (생략)

## 9. 전자·비전자기록물 관리

개정안은 공공기관 소관 전자기록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공기관 소관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 중 이중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⑦<br>(생략)                                                                                                                        | 제11조(지방기록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표준의 이행,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기록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이관, 그 밖에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지방기록원의 장은 국가기록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 국가위임사무-----. |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국가기록원-----.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② 공공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통령                                 |

②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령기록물의 생산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비전자기록물-----  
-----  
-----.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  
-----  
-----  
----- 국가기록원-----  
-----.

② 국가기록원-----  
-----  
-----  
-----.

제20조의3(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한 관리) ① 공공기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비전자기록물을 제3항에 따른 전자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로 변환한 경우에는 원래의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여 해당 전자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령에서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화 대상 비전자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형화된 서식에 따라 다량으로 생산되거나 접수되는 비전자기록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전자기록물일 것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자화하기로 하였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할 것

2.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할 것

3.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이 원래의 비전자기록물과 그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4.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전자화전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수 있을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것

5. 해당 비전자기록물에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

제21조(중요 공공기록물 등의 이중보존) ① ----- 공공기록물 -----

공공기록물-----  
-----  
-----.

② ----- 공공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공공기록물은 -----  
-----  
공공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국가기록원-----.

③ 국가기록원의 장은 중요 기록물-----  
-----  
-----  
-----.

④ 국가기록원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이중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 이중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먼저, 전자기록물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관 전자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20조제2항), 이에 따라 지방기록원의 장이 전자기록물 관련 정보시스템의 통합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현재 중앙 기록관리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과 통합하여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관리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개별적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스템 관리 비용이 각각 발생하고 기록자원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전자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 방법으로 전자기록물로 변환한 경우 원본인 비전자기록물 대신 변환된 전자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원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하는 기록물 중 이중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신설 하려는 것임.

현행 「공공기록물법」은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sup>13)</sup>.

그런데, 비전자기록물 중 종이문서나 필름 형태의 기록물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관리부담이 크고 검색·활용이 어려워 전자기록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요건(안 제20조의3제3항)>

|   |                                                                      |
|---|----------------------------------------------------------------------|
| 1 | 비전자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전자화할 것                                         |
| 2 | 비전자기록물을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할 것        |
| 3 |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이 원래의 비전자기록물과 그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
| 4 | 전자화한 공공기록물을 전자화 전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수 있을 것               |
| 5 | 해당 비전자기록물에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 |

- 13)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①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 기록물은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기관에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고 보존매체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자화 요건을 갖춘 비전자기록물의 전자기록물이 해당 비전자기록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화된 전자기록물이 원본 비전자기록물을 갈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원본의 보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본 비전자기록물의 보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보존을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0. 간행물의 관리 및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의 관리 특례

개정안은 간행물 발간 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공공기관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간행물 발간 시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간행물 3부”에서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로 변경하는 등 간행물의 관리를 개선하고, 유치원 등 공공기관이 시청각 공공기록물 및 행정박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의 관리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 ( <u>「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
|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u>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u> | ② -----<br>-----<br>-----<br>----- <u>국가기록원의 장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 (전자적 형태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발간된 간행물을 말한다)</u> 을 ----- <u>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u> -----<br>-----. |

현행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종이책자 3부를 보존 중인 간행물도 전자 파일로 전환하는 경우 1부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서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sup>14)</sup>.

간행물과 같은 책자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보관 효율성과 활용 가능성 면에서 장점이 크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자적 형태가 아닌 간행물 역시 기록적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간행물 1부와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간행물의 관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3.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기관코드를 포함한다),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 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제1항제3호의 간행물중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간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한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 11. 기록물 폐기 제도 개선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한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대상기록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후단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생략)                                                                |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
|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br>-----<br>-----<br>-----<br>---. 이 경우 공공기관은 폐기 전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폐기 대상 기록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폐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생략)                                                             |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                                                                                                                                             |



|                                     |                 |
|-------------------------------------|-----------------|
|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br>-----.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기록물 폐기 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물의 폐기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승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일관된 기록물 관리 기준을 유지하고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록물의 폐기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025년 2월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15)</sup>.

15) 의안번호 제2207270호, 모경종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333호 채현일의원안

## 12. 국가기관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보관 특례

개정안은 국가기록원장이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 중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보존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①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 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① <u>국가기록원</u> -----<br>-----<br>-----<br>-----<br>-----<br>-----.                           |
|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 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br>-----<br>-----<br>----- <u>국가기록원</u> -----<br>-----.                                                   |
| <신설>                                                                                                                        | ③ <u>국가기록원의 장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 중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보존시설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u> |
|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관리                                                                   | 제29조(기록매체 및 용품 등) ① -----<br>-----<br>-----                                                                       |

|                                                                                                                                                                                                                                                                                                                                                                                                                                                                                                                 |                                                                                                                                                                                                                                                                                                                                                                                                                                                           |
|-----------------------------------------------------------------------------------------------------------------------------------------------------------------------------------------------------------------------------------------------------------------------------------------------------------------------------------------------------------------------------------------------------------------------------------------------------------------------------------------------------------------|-----------------------------------------------------------------------------------------------------------------------------------------------------------------------------------------------------------------------------------------------------------------------------------------------------------------------------------------------------------------------------------------------------------------------------------------------------------|
| <p>할 때에는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과 상호 유통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기록물관리에 사용되는 기록매체·재료 등에 관하여 보존에 적합한 규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규격의 제정·관리 및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u>중앙기록물관리기관</u>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3(<u>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u>)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u>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u>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 <p>----- <u>국가기록원</u>-----</p> <p>----- <u>국</u></p> <p><u>가기록원</u>-----</p> <p>-----.</p> <p>② <u>국가기록원</u>-----</p> <p>-----</p> <p>-----</p> <p>-----</p> <p>-----</p> <p>-----.</p> <p>제30조의2(보존·복원 기술의 연구·개발) <u>국가기록원</u>-----</p> <p>-----</p> <p>-----</p> <p>-----</p> <p>-----.</p> <p>제30조의3(<u>공공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u>) -----</p> <p>-----</p> <p>----- <u>공공기</u></p> <p><u>록물의</u>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
|-----------------------------------------------------------------------------------------------------------------------------------------------------------------------------------------------------------------------------------------------------------------------------------------------------------------------------------------------------------------------------------------------------------------------------------------------------------------------------------------------------------------|-----------------------------------------------------------------------------------------------------------------------------------------------------------------------------------------------------------------------------------------------------------------------------------------------------------------------------------------------------------------------------------------------------------------------------------------------------------|

개정안을 통해 적절한 기록물 보존 환경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이 국가기록원의 보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장기 보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개별 국가기관이 별도로 보존시설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문적·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기록원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그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의 보존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장이 기록물에 대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의 장이 필요에 따라 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기록물의 이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3.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개정안은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해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u>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br><u>&lt;신 설&gt;</u> |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훈련) ① <u>국가기록원-----</u><br>-----<br>-----<br>-----.                                                                                          |
| <u>&lt;신 설&gt;</u>                                                                                              | ② <u>국가기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이하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
|                                                                                                                 | ③ <u>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 |

현재는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나 개정안과 같이 국가기록원이 교육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공공기관별 기록물 관리 실무자의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표준적인 기록물 관리 절차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4.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제도 개선

개정안은 국가지정기록물을 지정, 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하는 주체를 현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경우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서 및 물품을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 현행                                                                                                                                                                | 개정안                                                                                                                              |
|-------------------------------------------------------------------------------------------------------------------------------------------------------------------|----------------------------------------------------------------------------------------------------------------------------------|
| 제10장 <u>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u>                                                                                                                                        | 제10장 <u>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등</u>                                                                                                       |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u> |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정할 수 있다.</u> |
| ② <u>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 ② -----<br>----- <u>행정안전부장관</u> -----<br>-----<br>-----<br>-----                                                                 |
| ③ <u>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u>                                                                                                                                         | ③ <u>행정안전부장관</u> -----                                                                                                           |

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  
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  
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  
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  
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  
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  
-----  
-----  
-----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지정사실을 확인하  
는 증서 및 물품을 교부하여야 ---  
-----.

⑥ 행정안전부장관-----  
-----  
-----  
-----  
-----  
-----.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  
-----  
-----  
-----  
-----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지정기록물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이를 총괄하도록 변경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안 제43조제5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지정사실을 확인하는 증서 및 물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록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는 단순한 기록물 관리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국가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직접 총괄토록 하여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38 |